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
刊

統一經濟

1998. 6 통권 제42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6

1998

제42호

通 권 제42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8년 6월 15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용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정균 홍순희
 류재현 이태열
 황동언 박용주
 편집주간 이태섭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편집자의 글 -----

실질적인 경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3

권두언 -----

평화 공존·교류 협력에 힘쓸 때 • 양영식4

특별기획 -----

강인덕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 • 김중용7

특 집 -----

남북 경험 현장, 무엇이 문제인가?
 대북 사업의 경험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 이정식20
 IMF시대, 중소 대북 경험 업체들이 설 땅은 없는가 • 김영일25
 당장의 이윤보다 가능성에 승부를 • 노정호28

논 단 -----

남북한 분단 비용의 추정 • 홍성국36
 유휴 기계 설비의 대북한 이전을 통한 남북 경험 • 이상직49

통일다리 -----

북한 근로 단체 首長 교체가 갖는 의미 • 권경복63

북한경제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체계 • 권오홍69

체제전환국연구 -----

통일과 정치 관여의 변화: 독일의 교훈 • 강명세79

자료 -----

I. 1997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95
 II. 남북 교역 동향99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실질적인 경협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

정부는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민간 주도의 남북 경협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4월 30일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이 남북 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기 보다 그동안의 불필요한 각종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남북 경협 10년이 되는 올해 남북 교역은 1/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무려 43.1%나 감소하였다. 남북 교역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대북 교역 참여 업체의 자금 부족과 높은 물류 비용 등 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기인한다. 특히, 물류 비용은 남북 교역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추가 거래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남북 교역을 위축시키고 있는 이들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물류 비용만 국제 수준으로 절감된다면 기업의 채산성 확보로 남북 교역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에 있는 정부의 '4·30 조치'는 남북 교역의 감소 원인에 대한 처방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 상태대로라면 올해 남북 교역은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경 분리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불간섭·불개입주의에 바탕한 규제 완화와 경협 여건 조성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는 1997년 IMF 이전까지 남북 경협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더욱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남북 교역이 급감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그러한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남북 협력 기금'의 활용 등 적어도 현 단계에서만 큰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협 확대와 관련하여 모든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8년 6월

편집자

평화 공존 · 교류 협력에 힘쓸 때

양영식 / 민족통일연구원 원장

참다운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가 닦을 올린 지 100 일이 지나고 있다.

당대 최고의 통일 문제 전문가요, 평화 공존 · 평화 교류 · 평화 통일의 '3단계 통일론' · '공화국연방제(또는 연합제) 통일 방안'의 주장자로 널리 알려졌던 김 대통령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통일 정책 · 방안' 천명대신 '대북 정책'과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 · 화해 · 협력'의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대북 정책'의 목표와 대남 무력 도발 불용 · 대북 흡수 통일 배제 · 남북 화해 협력 추진의 '대북 정책 3대 원칙'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화해 · 협력해야 할 단계입니다"(민주평통 운영 · 상임위원 초청 정외대 간담회시 김 대통령 말씀(1998. 5.7))라는 대통령의 시대적 인식과 소명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아무리 통일이 지상 과업이라 해도 평화의 주춧돌을 놓고 교류 협력의 기둥을 세우지 않은 채 급히 통일의 지붕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번드르한 통일 구호와 방안이 쓰여진 연설문을 소리 높여 읽으며 통일 문제의 '대가'인양 가슴 내미는 오만한 지도자보다는, 진실로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지는 겸손한 자세로 차분하게 평화와 화해 협력의 벽돌쌓기에 땀을 쏟는 참다운 통일꾼 지도자를 우리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김 대통령이 '한국의 빌리 브란트'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독일 통일의 큰 열매를 주수한 영광의 '통일의宰相' 헬무트 콜(Helmut Kohl)보다는, '동방 정책'(Ostpolitik)으로 평화 통일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이를 키운 노익장 '평화의宰相'(Friedenskanzler)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통찰력과 겸손에 더욱 존경의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계 은퇴후 노부의 몸을 이끌고 사민당의 명예총재로서 구동독의 땅을 누비며 통일 총선거 유세에 나섰던 원로 민주 투사 브란트,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의 통일 선포식장에서 통일 재상 콜 수상과 前 구동독 수상 드베지에르와 감격적인 악수를 나누는 평화의 재상 브란트를 회상하면서, 필자는 한국의 '평화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브란트의 동방 정책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교해보는 가운데 양자의 통일 철학과 통일 추진 자세에 공통점이 많음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브란트의 경우를 보자. 60년대 베를린 시장 당시 브란트는 "베를린은 반드시 재통일된 독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이후 일기 시작한 유럽의 긴장 완화의 흐름과 구 동서독 접촉 · 왕래의 점진적 확대 추세 속에서 브란트는 학계 및 사계의 정책 논의에 힘입어 '동방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시작했다. '동방 정책'은 통일 구호대신 평화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유럽 평화 속의 독일 민족의 장래' · '동서 유럽의 가교로서의 독일의 역할' · '對구동독 · 구소련 · 동유럽 국가들과의 화해' · '핵무장 포기 · 무력 불행사 선언' · '구 동서독 상호 주권 존중의 원칙 선언 및 기존의 국경선 인정' · '이산 가족의 분단 고통 경감 · 해소' 등이 정책 내용의 대종을 이루었다. 말하자면, 브란트는 '통일정책론'을 '평화정책(Friedenspolitik)론'으로 바꾼 셈이었다.

물론, 서방 3대국과의 공조와 튼튼한 안보를 위한 '나토(NATO)'의 강화 등 '서방 정책'(Westpolitik)의 확고한 유지가 '동방 정책'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었음은 재언의 필요가 없다.

브란트의 '동방 정책'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일방적 양보'요 '나약한 유화 정책'(햇빛 정책)이라는 초기의 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大聯政' · '小聯政'을 거치는 가운데 착실히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한편, 초당적 '先평화 後통일 정책'으로 승화시켜나감으로써 급기야 「동서독기본조약」(1972)을 남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구서독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과 관련 4대국의 신뢰를 쌓아나갔다. 20년간 '동방 정책'의 꾸준한 전개로 라인강과 엘베강의 정치 기적을 이룩한 구서독의 초당적 통일 노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진정코 그들은 통일을 염원하기에 통일 구호의 함성보다는 평화 공존과 교류 협력을 위해 인고의 불땀흘리는 지혜를 발휘한 셈이었다.

필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상황 여건은 다르지만, 통일에의 열정과 의지, 평화 통일을 위한 비전과 철학, 통일 문제로 인하여 겪었던 온갖 고초와 수난, 그리고 정책 구상과 시행 과정 상에서 브란트와 공통점이 많다고 본다.

김 대통령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명제를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체제 통일 방안 중심의 정치적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이를 '흡수 통일'로 받아들이는 한, 평화 · 화해 · 협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것은 오히려 적대감과 움츠림을 낳을 뿐임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불신과 의구심을 자아내는 정치적 통일 정책·방안을 접어두고서 '대북 정책'을 당면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튼튼한 안보와 병행, 흡수 통일 배제, 평화 공존과 교류 협력 추진에 역점을 둔 '대북 정책'의 발상은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이라고 할 만하다.

'대북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이미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 '경정 분리 원칙'과 신축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남북 경협 활성화, 남북 이산 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대북 경수로 지원 및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등에 '대북 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서서히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포용적으로, 보다 친향적으로 '대북 정책'을 입안·전개해나가는 한편, 보다 많이, 보다 폭넓게, 보다 다양하게 남북 접촉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식들은 부딪혀야 불을 지필 수 있다.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만남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의 부식돌이다. 남북한의 주민과 정부는 서로 자주 만남으로써 민족 친화력의 불을 당길 수 있는 것이리라.

특히, 대북 지원 경험에 있어서는 그냥 줄 때는 그냥 주고, 경제인이 서로 장사할 때는 함께 버리를 맞대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많이 찾아 경제 원리에 따라 주고받으며, 또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은 서로 상응한 대가를 주고받는 식의 상호주의적 관행을 살려나가면 될 것이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은 일대일의 산술적 개념이 아니고, 신축적·상대적·시차적 의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형님 집에서 한 아름 떡바구니를 갖다주면, 아우도 빈 바구니를 그냥 보내지 않고 썩 고구마 한 두 개라도 넣어 답례로 보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미덕임을 늘 상기하자는 말이다.

'평화 대통령'이 이끄는 참다운 '국민의 정부'는 결코 '대북 정책'을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거나 비선조직에 매달려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임을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구 일원화'와 같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경직된 정책 발상을 고집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아무쪼록 '평화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는 오늘날 북한땅에는 강박한 붉은 정권과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동포들이 함께 살고 있는 병존 현실을 새삼스럽게 직시하기 바란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는 '이열치열의 안보 정책'을 바탕으로 초당적·범국민적 대북 정책('햇빛 정책'·'포용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함으로써, 임기중 평화의 수춧돌·교류 협력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기를 바란다. **完**